

統一情勢分析 2004-13

## 2004년 상반기 북한동향

2004. 7

정영태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최진욱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박형중(평화안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서재진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이교덕(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)

통 일 연 구 원

- 목 차 -

I. 정치 분야 동향 .....	1
1. 선군정치의 지속 .....	1
2. '선군사상'론의 전개 .....	1
3. '온 사회의 선군사상화' .....	2
4. 김정일에 대한 충성 요구 .....	3
5. 주민생활 향상 노력 .....	3
6. 사상교양 강화 .....	3
II. 군사 분야 동향 .....	4
1. 통상적 활동 지속 .....	4
2.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강조 .....	5
3. 대남 군사적 조치에 합의 .....	5
III. 외교 분야 동향 .....	6
1. 자국 입장 관철 노력 .....	6
2. 대미 압박 및 대일 반발 .....	7
3.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 .....	8
IV. 경제 분야 동향 .....	10
1. 주요 동향 .....	10
2. 부문별 경제 사정과 동향 .....	10
가. 식량 및 생필품 .....	10
나. 전력 및 기간산업, 사회기반시설 부문 .....	12

다.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부문 .....	13
라. 대외경제관계 .....	14
3. 평가 및 전망 .....	15
<b>V. 사회·문화 분야 동향 .....</b>	<b>17</b>
1. 사회통합 노력 .....	17
2. 생산성 향상 촉구 .....	20
3. 주민생활 변화 .....	21
4. 주민의식 변화 .....	23
<b>VI. 대남 분야 동향 .....</b>	<b>26</b>
1. 당국간 ‘민족공조’ 요구 .....	26
2. 남한 정국에의 영향 시도 .....	27
3. 총선 이후의 대남공세 .....	28
4. 적극적인 민간교류와 당국 차원에서의 대남 협조 .....	29

## I. 정치 분야 동향

### 1. 선군정치의 지속

- 김정일은 대규모 군 승진인사, 군부대 방문 등 여전히 군대의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, 선전당국은 선군정치의 합리화에 주력
  - 2004년 6월 현재 김정일의 군관련 활동은 32회로 총 공개 활동 46회의 70%를 점유<sup>1)</sup>

<'98년 이후 연도별 김정일 공개활동 현황, '04.6.25 기준>

연도 구분	'99년	'00년	'01년	'02년	'03년	'04년
총 활동	40	32	45	60	51	46
군관련 활동	26	12	25	22	37	32
점유율(%)	65	38	56	37	73	70

- “선군정치는 백두산 위인들의 계속혁명 사상과 의지, 총대중시전통의 빛나는 계승이며 발전”으로 선전

### 2. '선군사상'론의 전개

- 통치이데올로기로써 주체사상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지탱해 온 것<sup>2)</sup>과 같이 김정일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담보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의 선군사상을 대대적으로 전파·보급

1) 통일부, 「주간 북한동향 699호」.

2) 이종석, 「현대 북한의 이해」(서울: 역사 비평사, 1995). p. 63.

- 선군사상을 “주체사상의 계속이며, 새로운 높은 단계”로 규정
  -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“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 사상”으로까지 미화
- 최근에는 ‘선군시대’, ‘선군단결’, ‘선군통일체’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할 것을 역설
  - ‘선군단결’에 대해 “총대를 잡은 무적강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온 사회가 총폭탄·결사수호정신의 일치를 이룬 조선의 일심통일체”라고 주장(1.22, 노동신문)
  - ‘선군통일체’를 “선군명장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총대동지들을 주력으로 굳게 뭉친 강철의 결정체”로 설명(6.16, 노동신문)

### 3. ‘온 사회의 선군사상화’

- 선군정치 찬양 가요 보급,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 부각, 선군정치 주제 시·가요 창작, 선군사상을 반영한 만화영화 보급, ‘선군청년전위 열성자대회’ 개최 등의 조치를 통해 ‘온 사회의 선군사상화’ 추진
- 『전당사상일꾼대회』(2.26-27)에서 선군시대 당사상사업의 ‘혁명적 전환을 위한 과업’을 토의
  - 동 대회를 통해 선군사상 중심의 ‘사상적 일색화’를 집중적으로 강조
  - ※’74년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‘김일성주의’로 체계화·정식화하고 ‘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’를 추진하였음에 비추어 최근 ‘김정일주의’라는 표현 사용과 ‘온 사회의 선군사상화’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#### 4. 김정일에 대한 충성 요구

-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과 ‘혁명의 수뇌부’에 대한 충성을 요구
  - 김일성 92회 생일(4.15)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일의 총대중 시사상과 선군정치 확립 등 혁명업적 계승 집중 부각
  - 김정일 당사업 개시 40돌(6.19) 중앙보고대회에서는 김정일의 ‘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’을 통한 당과 군대의 혼연일체 확립을 강조

#### 5. 주민생활 향상 노력

- 7·1조치를 포함한 경제분야에서의 개혁 조치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내각의 역할 강조 및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
  -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 회의(3.25)를 헌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역설

#### 6. 사상교양 강화

- 개혁적 조치 이후 자본주의 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 및 병사들의 사상적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교양 강화
  - '70년대 당시의 사상투쟁 분위기를 상기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에 대응

## II. 군사 분야 동향

### 1. 통상적 활동 지속

- 자원부족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동계훈련('03.12.1-'04.4.30)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은 생략한 채 '자원절약형 훈련' 방식으로 진행
- RSOI/FE(3.22-28)에 대응하여 등화관제 등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고 군에 대한 지속적 사상교육 실시
  - '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략증강' 등에 대해 '새로운 조선침략전쟁 계획'의 일환, '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'이라고 비난 강화
- 4월 '꽃게잡이 철'을 맞아 서해접적지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
- '태양절'에 즈음하여 승진인사(소장→중장: 8명, 대좌→소장: 65명)를 단행, 군의 사기진작과 절대적 충성을 유도
- 동계훈련을 마친 지상군은 5월 이후 영농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가운데 일부 부대는 전투준비 판정검열과 하계훈련(6-10월)을 준비

### 2.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강조

- 김정일의 62회 생일(2.16) 기념 중앙보고대회, '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'(74.2.19) 3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등에서 긴장정세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강경대응을 천명

-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맞서 김정일 중심의 단결과 군민일치 촉구
- “적들의 총에는 대포로 맞서며,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반미대결전에서 승리”할 것을 다짐

### 3. 대남 군사적 조치에 합의

- 두 차례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(1차: 금강산, 2차: 설악산)에서 “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”에 합의

### Ⅲ. 외교 분야 동향

- 상반기 북한 외교는 후세인 체포 및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

#### 1. 자국 입장 관철 노력

-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완화와 함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
- 2차 6자회담(2.25-28) 개최에 앞서 ‘첫 단계 행동조치’ 수용을 미국 측에 재차 촉구(1.5-6, 노동신문·조선중앙통신)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대북 강경 자세 포기와 북한의 주장 수용을 요구
- 2차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계획 포기 의사 및 안전보장 등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통해 ‘동결 대 보상’안 관철을 시도
  - 차기회담 일정 및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
- 2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(5.12-14)에 참석,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요구 및 CVID 수용 불가 입장 견지
  - “인내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6자회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회담의 진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”이라고 하였으나 철두철미 ‘동결 대 보상’안을 주장

- 3차 6자회담(6.23-26)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경제제재 해제, 200만kw 전력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 등을 대가로 영변의 5MW 짜리 흑연감속로를 포함해 모든 핵무기 관련 계획 폐기를 언급

## 2. 대미 압박 및 대일 반발

-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, 북한의 핵능력과 핵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
  - 지금까지 밝혀온 ‘재처리 완료’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, 방북(1.6-10)한 미 스탠포드대 루이스 교수 일행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공개
- 동시행동원칙, 평화적 핵 활동 포기 불가 등 기존 입장 고수 속에 미국의 CVID 요구의 부당성 부각에 주력하는 한편, RSOI/FE를 ‘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대한 배신’으로 규정, “미국이 대화 분위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”고 주장
- 『뉴욕타임즈』가 제기(5.22)한 리비아와 북한 간 우라늄 거래설에 대해 “근거 없는 날조품으로 핵물질 전파자의 딱지를 붙이려는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”이라고 비난(5.29, 조선중앙통신)
  - “미국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자료도, 신빙성도 없는 허구적인 농축우라늄설을 집요하게 붙어대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주장(5.31, 노동신문)
- 미·일 등의 『동북아 안보구상』 등에 대해서도 “동북아에서 당면 안보상의 과제는 적대관계·불신 해소를 통한 지역 나라들 사이의 신

퇴조성인 바, 이것이 없이는 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”고 주장  
(4.2, 노동신문)

- 한편 일본의 대북 강경조치 추진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
  - 일본의 ‘특정선박입항금지법’, ‘전시법’, ‘개정외환법’ 입법 추진을 ‘대북압살 목적의 국제적 포위환 형성’이라고 비난
- 일본의 대북제재 법안 마련을 PSI 등과 연계시켜, 미·일 안보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 실행 가능성 차단 시도

### 3.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

-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확보 및 외교적 고립을 방지
  - 리자오싱(李肇星) 중국 외교부장 방북 시 김정일과의 면담(3.24)을 통해, 북·중간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확인함과 함께 실무그룹 발족과 관련한 양국간 의견 교환
  - 닝푸쿠이(寧賦魁) 북핵 대사 방북(3.13-16)
  - 김정일 방중(4.19-21)
- 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 및 비동맹국가 등과의 양자 관계 회복을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노력도 전개
-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체코·영국을 방문(3.10-18)
  - EU의 대북 인권결의안 추진에 즈음하여 핵·인권 문제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관계개선 모색
  - 의회외교 강화를 통해 EU내 대북 우호적 여론 조성 시도

- 이집트 정부문화대표단(4.17-20)과 체코 외무성 대표단(4.27-5.1)을 초청
  
- 북·EU 수교('01.5.14) 3주년을 전후로 정부·의회 대표단 및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진행
  - 독일 사민당 플루그 연방의회 의원 일행(5.11-15), 폴란드 외무성 대표단(5.15-18), 영국 동아시아 연구소(EAI) 대표단(5.22-29) 방북
  - 궁석웅 외무상 부상 일행, 한반도 문제 세미나(5.19) 참석 위해 영국 방문
  
-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북(5.22)
  - “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가족 5명 송환, 일본인 피랍 의혹자 10명에 대한 재조사 추진, 식량 25만 톤 대북 지원” 등에 합의

## IV. 경제 분야 동향

### 1. 주요 동향

- 2004년 경제정책 방향은 ‘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 보장’과 ‘인민생활 보장’
  
- 2002년 7월 전후로 실시되고 있는 ‘경제관리개선’을 지속적으로 추진
  -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범위 축소, 기업과 기관 등의 자율성 확대, 종합시장 개설 확대, 가두매대 설치 확대 등
  - 신년 공동사설과 최고인민회의(3.25)에서 내각의 권위 제고, 모든 단위에서 ‘당, 행정의 일치’ 보장, 재정운용에서의 실리를 강조
  
- 개방정책 탐색 지속
  - 수출 상품 전시회,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, 학습 사절단의 중국 파견, 경제관련 회의 참가, 개성공단 건설 가속화 촉구, 수출 촉진 등
  
- 원조무역 또는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한 중·북 국경무역 양태를 넘어서 중국 기업의 대북한 상업적 교류 협력이 확대

### 2. 부문별 경제 사정과 동향

#### 가. 식량 및 생필품

- 2004 곡물 회계연도에는 식량 사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

- 작년도 곡물 생산량은 425만 톤으로 추정되는 바, 1993년의 427만 톤 생산 이후 최고의 생산량
  - 일본의 쌀 지원 약속 분 25만 톤과 한국정부 지원 40만 톤을 합하면 총 490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추측
  - 여기에 국제사회의 기타 지원량 및 자체 상업적 수입량(2003년도의 경우 58만 톤)까지 합하면 일인당 500g을 기준으로 한 최소 수요량 540-55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
  - ※2003 곡물회계연도의 경우 최소 수요량 기준 총 곡물 수요량은 542만 톤, 총 공급량은 522만 톤이었음.
- 통일부는 2003년도 후반기에 쌀값이 200원선에서 안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
- 올 해 초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쌀값이 4-500원으로 폭등했으나, 2004년 중반기 260원선을 유지
-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지정리, 수로공사를 통한 식량증산과 고기 등의 부식물 공급 확대를 독려
- 이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식료가공공장(1.11), 평남도 토지정리사업(3.17), 군부대 축산시설(3.16, 4.5)을 현지도
- 감자·콩, 누에고치 등 공예작물 생산도 독려
- 최초의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(1.27), 두 번째의 「국제감자과학토론회」(6.18), 「전국여맹누에치기열성자회의」(4.27) 개최
- 한편 중국과의 수출입 물량 증대, 7·1조치에 의한 소비재 증산 효과 등으로 생필품난도 다소 완화되었을 것으로 평가

- 소비품 양·질제고 및 외화 절약을 위해 경공업 현대화 시범공장을 선정하고 주요 1차 소비품의 수입대체를 추진
  - 평양방직, 영변건직공장을 현대화 시범공장으로 집중 지원하면서 외제소비품 대체 의지 표명

#### 나. 전력 및 기간산업, 사회기반시설 부문

- 2003년도 전력생산이 20% 증가했고, 금년에도 20%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
  - 전력 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일정 정도 완화되었을 것이며, 이것이 공업 생산 증대의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
- 한편 산업현대의 핵심부문인 기계공업 정상화를 독려
  - 김정일 위원장은 낙원기계공장(5.18), 구성공작기계공장(6.2), 청천강기계공장(6.3)을 잇달아 현지지도
    - ※성·중앙기관·각 도, 공장·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모범적인 구성공작기계공장 참관(6.10)
-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및 화력발전소 보수에 주력하면서 중·소형 조수력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보수 병행
  - 대규모 수력발전소 조기 완공 추진
  - 양강도 삼수발전소 착공
  - 북창, 평양, 동평양 등 주요 화력발전소 이외 100여개의 중·소형 발전소, 서해안 웅진군 조수력발전소, 평양시 송전선 보수공사 추진

○에너지·원자재 확보 및 외화 획득을 위한 주요 광업 생산 활성화에 주력

- 7·1조치 이후 누진성과급 실시, 오스트리아와의 기술협력 등으로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 생산 활발

- 무산·검덕 등 주요 금속광산은 매달 생산계획을 초과 완수하면서 대중 수출 확대

※금년도 1-3월중 대중 수출액이 전년비 철강 246%(25백만 불), 아연 2,900%(1백만 불) 증가

○평양시 중심거리 정비공사 완료(4.14), TKR/TSR 연결 및 철도시설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 추진

- 평양대극장에서 3대혁명전시관에 이르는 중심거리의 도로포장, 상·하수도, 상업봉사망, 건물외장 보수

- TKR/TSR 관련 남·북·러 전문가회의 참가(4.28, 모스크바), 신형 객차 600량 생산, 콘크리트침목공장 현대화 등

#### 다.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부문

○산업 현대화와 현장 중심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강조

- 2004년 예산에서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전년비 60% 증액

- 연구성과에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여 연구의욕 제고, 중앙과학기술축전(4.4) 등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경쟁 유도

○IT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정비와 S/W프로그램 개발에 주력

- 「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」를 발족(5.15)시켜 S/W분쟁해결,

- 저작권보호, 해외 IT업체들의 투자여건을 개선
- 중국 심양에 『조선6·15심양봉사소』를 설립(3.26)하여 S/W·멀티미디어프로그램 등을 개발·판매

## 라. 대외경제관계

- 한국과 중국을 주요 대외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이 활발
- 국제전시회, 상품판매센터 개설을 통해 무역 확대 도모
  - 제7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개최(5.17), 전국수출상품전시회 개최(5.18), 북-중 상품판매센터 개설(5.28)
-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정비
  -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·광고규정 발표(3.5)
    - ※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중국 등 북한의 남북경협 관계자들이 현대 아산 관계자들과 중국 상하이 등 시찰(5.25)
  -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설립운영, 세관, 출입·체류·거주 규정 발표(5.26), 외화관리·광고·노동규정 발표(5.29)
- 러시아·EU 등 유럽과의 경제협력관계 활성화 모색
  - 러시아와 전력, 철도, 건설, 농업, 임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업협력협정 기한 연장에 합의(4.28)
  - EU 의회대표단이 방북하여 경제협력 협의(2.21),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체코·영국에서 시장경제학습(3.10)
  - 체코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(4.27), 폴란드와 합작해운사 운영 논의(5.15), 스위스와 평스합영회사 조업(6.10)

- 동남아시아·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
  - 베트남에 경제시찰단(2월, 4월)과 금융연수단(5월)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『무역결제 업무협정』(3.5)과 『규격화·계량 및 품질관리부문 협정』체결(4.27)
  - 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·태국을 방문하여 산업시찰 및 경제협력 확대 문제 협의(6.19)
  - 대표단(단장 양형섭)의 아프리카 4개국 방문(1.20), 제15차 북·리비아 공동위원회 참가(2.21), 북·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2차회의 참가(3.31)
  - 1/4분기 대중 교역은 총1.9억 달러로 전년비 18.7% 증가
  - 단동 옥류관김치공장 설립(5.16), 조선울림운송합영회사 설립(5.27), 영초건재품합영회사 지붕재공장 조업(5.31) 등
  
- 김정일 방중(4.19) 이후 노동신문,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중국 개혁·개방 이후 경제 발전상 지속 보도

### 3. 평가 및 전망

- 식량과 전력 등 가장 기초적인 물자의 공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 기미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물자부족과 인플레이션은 지속
  
- 인플레이션 지속은 다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
  - 7·1조치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물자의 량이 증가 했는데, 이 부문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 심화
  - 일정 정도의 경제상황 개선 및 7·1조치 등으로 주민의 일반적인 기대(욕구)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

- 이와 같은 내부 사정 때문에 식량·소비품의 증산 및 수입 압력이 정책당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평가
  - 공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욕구수준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에 앞으로도 거시경제적 불안은 계속될 전망
  - 당국은 식량·생활품 부문에서의 ‘자유화’ 확대, 수출 증대를 통한 수입 증대, 대외개방 확대 등의 정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

## V. 사회·문화 분야 동향

### 1. 사회통합 노력

#### <사상교양 강화>

-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체제의 정당성이 실추되고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해이해짐에 따라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유지하고자 노력
  - 7·1조치 시행과정에서 사상이 이완될 개연성을 차단하는 한편, 전쟁경험이 없는 전후 세대의 사상무장을 촉구·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- 핵문제로 미·일 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서 반미·반일 계급교양을 한층 강화
  - 주민들에게 계급교양관 참관 및 영웅따라배우기 운동을 독려하면서 미제와 일제에 대한 결의모임 등을 전개
- 최근 신의주, 함흥, 강원 평강 등에서 계급교양관 참관을 독려하고 결의모임을 개최하는 등 주민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「새세기 총폭탄영웅」 ‘김기봉’ 등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
  - '04.2 군사훈련 중 대전차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많은 인명을 구하고 사망하였다는 군관 김기봉(31)에게 ‘공화국 영웅칭호’를 수여(4.30, 조선중앙통신)

- 보도매체를 통해(2.9, 2.22, 3.15, 노동신문) 특히 청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강조
  -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전선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할 세대가 청년들이라고 강조
  - 청년들의 운명은 영도자에게 달려 있으며, 청년중시는 김정일의 영원한 정치철학으로써 모든 청년들은 혁명1세대처럼 수뇌부 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
  
- 사회주의건설에 청년들을 동원하려는 것 외에 청년들의 수령결사옹위 정신무장을 강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

<집단주의 강조>

- 배급을 중단한 이후 사회주의의 기초는 집단주의라는 논지의 주장 전개
  - “사회주의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집단주의”, “사회주의에서 집단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곧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”이라면서 집단주의를 강조(5.17, 평양방송)
  -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개인주의, 배급주의 등이 확산되자, 군·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고 내부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평가
  
- 최근 “일심으로 굳건한 우리식 사회주의” 제하의 글을 보도(5.17, 조선중앙방송)
  - 사회주의 사회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수령, 당, 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결할 때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

- 수령·당·대중의 일심단결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함으로써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을 떨칠 것을 촉구

○향후에도 경제·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치사상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주의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

#### <반일주의 재등장>

○금년 초부터 일본의 대북제재법안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

-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 등에 대응하여 일본의 과거사 만행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사죄와 보상 등 과거청산을 요구
- 주민들, 특히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한 반제·반일 사상교양을 통해 체제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

○최근 각지 영화관, 문화회관을 비롯한 영화보급망을 통해 기록영화 <역사는 고발한다>와 예술영화 <임진왜란>, <돌아오지 않는 밀사>, <피묻은 랍패>, <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>, <살아있는 영혼들>등 반일 주제의 영화들을 널리 상영

- “영화를 관람한 각 계층 근로자와 학생들이 일본반동들이 어제의 교훈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재침의 길에 나선다면 선군으로 다져온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”고 보도(5.14, 조선중앙통신)

## 2. 생산성 향상 촉구

### <강계정신 강조>

- 노동신문 사설 “강계정신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자”(5.25)와 “혁명적 군인정신, 강계정신으로” 제하의 사설(6.9)을 통해 '90년대의 시대정신'을 '혁명적 군인정신'과 '강계정신'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영도업적을 선전
  - 김정일은 '96년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, 결사관철의 정신, 영웅적 희생정신을 '혁명적 군인정신'으로 명명
  
- 군대에서 창조된 '혁명적 군인정신'이 사회, 특히 경제단위에서 개화된 것이 '강계정신'
  - '혁명적 군인정신', '강계정신'과 더불어 '성강의 봉화'로 인해 수많은 발전소와 공장, 목장, 청년영웅도로, 광명성제염소 등이 건설되었으며, 광명성 1호를 발사할 수 있었다고 선전
  
- '혁명적 군인정신'과 '강계정신'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고,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유도하며, 경제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사조 유입 및 사상적 이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
### <문학작품을 통한 생산·근로의욕 독려>

- 각지 공장·기업소의 문학모임을 통해 문학예술 작품들이 널리 보급

되어 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으로 고무·추동하고 있다고 보도(5.28, 조선중앙방송·평양방송)

- 전력공업부문 노동계급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열정을 안겨주는 노래와 시들을 애창 애송하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
- 각지의 탄전과 기계설비 제작 현장, 경공업공장 노동계급들도 조국사랑의 노래들과 이수복 영웅의 서정시 ‘나의 조국’을 새겨가며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고 있다고 선전

○ 한편, 문학신문 최근호(5.22) 사설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교훈적 내용에서 벗어난 작품 경향들을 비판

- “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싸워 나가는 낙천적 기질은 선군시대 성격 창조의 중요한 속성이며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가, 예술인들이 현실생활을 체험해야 한다”고 강조

○ 방송과 각종 문학모임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력 증대 성과를 적극 선전하고 작가들에게 ‘선군시대의 낙천적 기질’을 강조하는 것은 선군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작품창작을 독려하고, 이를 노동계급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
### 3. 주민생활 변화

<‘우리민족 제일주의 정신’ 고취>

○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'67.5 김일성의 ‘봉건잔재 일소’ 지시에 따라 민속명절 행사를 전면 금지해 오다가, 김정일의

‘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’ 강조와 함께 ’89년부터 설·단오·추석을 3대 민속명절로 정하고 휴무일을 실시

- ’03년부터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오를 수리날로, 추석을 한가위로 고쳐 부르게 하였으며 수리날의 풍습소개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을 선전
- 금년에는 김정일의 당중앙위 사업시작 40돌을 맞아 단오행사도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다채롭게 진행
  - 평양에서는 씨름경기, 윷놀이, 민족음식품평회 등 각종 민속행사와 함께 예술소조원들이 공연
  - 청진시에서는 민족음식찾기 등을, 함흥시에서는 조선옷 자랑무대, 민족음식품평회 등을 실시
  - ’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황소상 전국근로자 텔레비전 민속씨름경기 대회를 청장년 선수들의 비교씨름과 60청춘 씨름경기로 나누어 진행
- 이와 같이 단오를 맞아 다채로운 민속행사를 개최하고, 이를 선전하는 것은 민속명절의 강조를 통해 ‘우리민족 제일주의’ 정신을 선전 고무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이완을 차단, 결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

#### <여성들의 지위 향상>

- 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장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가 향상

- 공장·기업소에 출근하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가정 내 발언권이 약화되는 경향
- 남편은 ‘불편’, ‘집지키는 멍멍이’라는 은어가 유행

#### 4. 주민의식 변화

○북한 당국의 사상교양과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가치의식과 사회의식은 빠르게 변화

##### <개혁·개방에 대한 요구 확산>

○주민들은 2002년의 7·1조치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중국의 개혁·개방 정책을 따르는 새로운 개혁·개방으로 기대하였으나 점차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, 개혁·개방을 더욱 요구

○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향후 북한이 나아가야 할 모델로써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

##### <자유화 바람의 확산>

○2002년 7·1조치 이후 주민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암시장에서의 장사행위가 양성화되어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점

- 공산품 매매를 허용하는 종합시장의 설치로 매매의 품목과 양이

확대됨에 따라 상품의 거래와 더불어 외부정보의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

○특히 공산품 거래의 허용으로 TV, 녹음기 등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고 외부의 영화와 비디오의 거래도 증가

○종합시장에서 구매한 신형 외제 TV로 평양-함흥 이남 지역에서 수신되는 남한의 TV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

<사상성에서 돈 중시 및 물신주의로의 변화>

○무상배급제도의 폐지, 임금노동제 및 종합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은 크게 변화

- 7.1조치 이후 물가의 급등, 시장에서의 물품 구매,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의 완전 이행 등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였고, 물질 우선의 사고가 강화됨으로써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

<국가 의존적 의식의 약화와 개인 자력갱생적 의식의 강화 >

○배급제도 붕괴이후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추세가 심화

- '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재개될 것이라던 생각이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화

○자력갱생 의식은 장사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이는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돈을 버는 길은 장사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임.

## VI. 대남 분야 동향

○ 6·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대남공세를 전개한 것이 상반기 동향의 특징

### 1. 당국간 ‘민족공조’ 요구

○ 2004년에 들어 ‘민족공조’라는 구호 아래 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를 실천”하도록 요구

- 이전까지 구호의 성격이 강했던 ‘민족공조’의 요구가 민간차원에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반미, 남북협력의 ‘실천’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

○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김령성 북측 단장은 “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 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”라고 강조

- 남북관계의 전진을 방해하는 주범은 미국이므로 미국에 반대하면서 남북협력을 강화하자는 요구

○ 당국 공조의 주요 과제로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 지지와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

-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체제의 해체 요구
-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지 않는 남한 당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요구<sup>3)</sup>

---

3)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간 협력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“미국의 핵 소동에 가담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”라며 극렬 비난 (『평양방송』, 3.8)

- ‘민족공조’ 주장은 대북 경협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, 우리 사회 내에 팽배해진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·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·미 공조 이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<sup>4)</sup>

## 2. 남한 정국에의 영향 시도

-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구도의 실천과 당국간 공조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에 실망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이 벌어지자 적극적 공세 전개
- 정부가 발표(3.4)한 안보정책 4대 전략기조 중 ‘협력적 자주국방’,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(3.22-28)에 대해 ‘반공화국 압살책동’에서 기본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북침을 위한 대규모 전쟁소동이라고 비난
  - 안보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시켜 국론분열을 시도하는 한편, 민족공조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
-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, ‘탄핵소동’이 남한 내부 문제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‘미국과 그 하수인들인 보수야당에 의한 의회 쿠데타’로 비난

---

4) “남조선의 민심은 반북대결에서 련북화합으로,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서고 있으며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”고 주장(『통일신보』, 6.5)하면서 “민족공조력량, 통일에국력량이 비할 바 없이 장성장화됨에 따라 조선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북 대 남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되는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다”고 평가(『로동신문』, 6.15)

- 총선에서 극우보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개혁세력에게 표를 주어 정치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선동
  - 탄핵을 반대하는 남한 민심에 동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호의적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동시에 보수세력이 득세할 경우 남북경협에 소극적이고 핵문제 해결에서도 대북 압박책 구사 가능성을 경계

### 3. 총선 이후의 대남공세

- 4·15 총선결과를 “6·15 공동선언의 승리이며, 인민대중이 반민주세력과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”라고 강조하면서 반미·자주화 투쟁 선동
  - 국가보안법 폐지, 이라크파병 저지, 미군철수 등을 주장
- 국가보안법은 “우리민족끼리의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파쇼악법이며, 민족화해와 통일에 결정적 장애물”이라고 주장하고 구속학생 석방과 보안법 철폐 투쟁 선동
  - 『조평통』서기국 보도 868호(5.5), 869호(5.6), 『범민련』북측본부 대변인 담화(5.4), 범청학련북측본부 성명(6.7), 민화협 성명(6.9), 조선학생위 성명(6.11), 범민련북측본부 성명(6.12) 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
-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통과와 관련, ‘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매국세력’에 대해 비난하는 등 반미·자주화 투쟁을 촉구
  -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해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때에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비난(5.14, 조평통 대변인 담화)

- “새 것을 지향하는 남조선 인민들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는 것”이라 주장(5.19, 평방)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근본적인 과제로 제기
  - “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자”고 선전(5.14, 조국전선 중앙위·조평통)
  - 주한미군 전력증강 및 재배치,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파견 등을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범죄적 기도라고 하면서 ‘민족의 공멸방지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’ 촉구

#### 4. 적극적인 민간교류와 당국 차원에서의 대남 협조

- ‘민족공조’ 아래 적극적인 민간교류 행사 추진
  -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학술회의(2.24-2.28, 평양) 및 「2004년 남북 노동자 5·1절 통일대회」(5.1, 평양), 제6차 「평양의 학과학토론회」(5.3) 등 개최
  - 남한에서 개최된 「우리민족대회」(6.15)와 「국제토론회」(6.14-15) 등에 북한 고위인사 등 대표단 파견
- 탄핵정국과 총선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해결되자 남북한간 북핵문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6자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남북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6자회담에서 남한의 제안과 역할을 인정
  - 회피해 왔던 군사회담도 수용하여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에 합의
- 남한 이외에 경제적 지원을 해 줄 나라가 없고 미국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자도 필요한 상황인 바, 남북간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

- 그러나 6·15 공동선언의 이행과 '민족공조'를 요구하는 대남 공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
  - 안보측면에서는 한미공조 해체,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반복
  - 경제측면에서는 핵문제와 관계없이 경협이 진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리확보 추구 시도